

상해(인정된 죄명: 폭행)

[대법원 2013. 7. 12. 2013도5165]



【판시사항】

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, 법원이 그 부분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한 것에 절차상 잘못이 있는지 여부(소극)

【판결요지】

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은 그 부분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,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부분을 송달하여야 하는 취지가 아님은 문언상 명백하므로, 공소장변경신청서 부분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.

【참조조문】

형사소송법 제298조,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
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

【상 고 인】 피고인

【원심판결】 서울북부지법 2013. 4. 17. 선고 2012노1555 판결

【주문】

】

상고를 기각한다.

【이유】

】 상고이유를 살펴본다.

1.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은 그 부분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,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부분을 송달하여야 하는 취지가 아님은 문언상 명백하므로, 공소장변경신청서 부분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.

기록에 의하면,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이 있었던 원심의 제2회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분을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, 원심의 소송절차에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분을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잘못이 없다.

2.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,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

한계를 벗어나는 잘못이 없다.

3. 변론의 병합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이 사건을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.

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.

4.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대법관 이인복(재판장) 민일영(주심) 김신